

전문성 있는 식량정책으로 쌀가공산업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1980년대에 쌀의 완전자급을 이룩한 이래 쌀은 한국인을 기아로부터 해방시킨 일등공신이었다. 그 당시 1인당 쌀의 연간 소비량은 130kg에 달해 지금의 2배 이상을 먹었고 명실상부한 주식이었다. 그러나 국제정세의 변화와 소비자의 기호에 대응하지 못한 식량정책으로 정부지원을 받아야만 했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계속된 무역자유화를 위한 세계 경제 질서 재편에 관한 논의(소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방관자로 걸돌던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후 쌀 시장 개방 반대를 20년간 고수하다가 국내 총생산량의 10%에 달하는 40만 톤의 쌀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정부가 연간 35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여도 쌀값 폭락을 막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WTO 체제에서 빚장 풀린 농산물 무역자유화로 밀, 옥수수, 육류 등 외국산 식품들이 무제한

수입되었다. 우리 국민은 쌀 소비량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밀(일인당 30kg/년)을 매년 소비하고 있으며, 육류(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소비량은 1980년의 1인당 연간 11.3kg에서 2013년 42.8kg으로 4배로 증가하는 폭발적인 식품소비패턴의 변화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우리 밥상에서 쌀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WTO 출범 5년만에 쌀시장을 개방했고, 밀가루 제품에 쌀가루를 10% 혼합하는 R10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 28%이던 곡물자급률을 2014년에는 29%로 1%를 올렸다. 우리는 같은 기간 곡물자급률이 29.7%에서 23.8%로 6%나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근본 원인은 양정정책을 꾸준히 이끌고 가는 전문적인 인적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우루과이협상 8년간 우리 측 정부 대표가 7번이나

바뀌는 등 담당 전문 인력이 없었다. 장기적인 전략을 계획하기 어려운 구조였던 것이다.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은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을 올리고 쌀 산업을 회생하기 위해 쌀 생산 감축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쌀 재고량을 늘리고 가공용 쌀 공급을 안정화하여 쌀의 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분단된 한반도의 상황과 북한의 기아선상에 있는 주민들을 생각할 때 통일미의 비축은 시급히 해야 할 일이다. 재단은 통일미 120만톤의 항시 비축제도와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주민에게 즉시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쌀 무상 지원제도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4년도에 출판된 '선진국의 조건 식량자급'에 수록된 시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통일미 120만톤 항시 비축을 위해 매년 60만톤의 쌀을 2년간 비축하고 2년 후 쌀 가공산업의 원료로 방출한다. 비축 쌀 60만톤 중 40만 톤은 의무(MMA) 수입쌀 전량을 비축용으로 사용하며 국내 생산 쌀 20만 톤을 추가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4,844억원(2012년 가격기준)으로 추산된다. 이 일은 통일부의 사업으로 2012년도 외교통일 예산의 11.8%에 해당한다. 북한주민을 위해 통일미 120만 톤이 항시 비축되어 있다는 것은 북한 주민에게 강력한 통일 메시지가 될 것이다. 또한 매년 60만 톤의 가공용 쌀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쌀 가공식품산업은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를 맞을 것이며 쌀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쌀 가공식품의 생산과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주민에게 쌀을 지원하려면 관련법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정책에서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쌀 무상지원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저소득 영세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40만 명에게 매일 10kg(120kg/년)의 쌀 또는 쌀가공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면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주민에게도 자동적으로 식량이 지원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추가 예산은 8,106억원(2012년도 가격기준)으로 추산된다.

쌀 시장 개방, 통일미 비축, 저소득층 쌀 무상지원 등 쌀가공산업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쌀 수요 창출길을 찾아야 한다

이 일은 보건복지부 사업이며 2012년도 보건복지 예산의 0.8%에 불과하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가 최소한 국민의 식량을 책임지는 진정한 복지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한다. 이 제도로 유발되는 쌀 소비확대 효과는 연간 17만 5천 톤으로 추산된다.

새로운 쌀 수요 정책 적극적으로 펼쳐야

우리나라는 통일을 대비한 쌀 120만 톤 항시 비축과 저소득층 쌀 무상지원제도에 더하여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고품질 완전미의 유통, 쌀가공산업의 정책적 지원 등 쌀 수요창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면 연간 60만 톤의 새로운 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계산은 우리 정부의 쌀 생산 감축 정책이 바른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금년도 쌀 생산량 추정치는 387만톤으로 10년전에 비해 100만톤이나 감소한 양이다.

벼 재배면적도 73만 8천 헥타르로 10년간 18만 6천 헥타르 감소했다.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을 위한 양곡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통일 준비를 역행하고 있다.

식량농업정책은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는 장기적이고 일관된 식량안보 의식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이제까지 경험한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책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농정개혁 정책을 펴고 있지만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농림부는 쌀을 통일 복지국가를 건인하는 주역으로 격상시키는 역할을 준비해야 한다.



이철호 이사장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이사장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
미국식품공학회(IFFT) 펠로우
국제식품과학기술한림원(IAFoST)